



#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팀

## 뉴캐슬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강력 건의 종계인들 ND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전국 종계인들은 뉴캐슬병이 살처분보상금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질병이 상재질병이며 폐사한 닭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지급을 철저히 외면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살처분 보상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정부의 양계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계속될 경우 전 양계인과 연대하여 실력행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닭 뉴캐슬병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종계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세미 근절대책과 맞물려 있어 정부의 추후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계란 종량등급 기준(안) 본회 의견 제시 특란 이하 6원씩, 나머지는 현행유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란등급 기준(안)에 대한 본회의 의견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다. 생산자들은 현재 국내소비 형태를 분석해 볼때 큰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으로 인해 특란위주의 유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여 등급을 조정함으로써 발생할 수있는 유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량등급을 유지하되 특란 이하는 6원씩 균일화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즉 생산자 제시(안)은 왕란 70g이상, 특란 60g이상~70g미만, 대란 54g이상~60g미만, 중란 48g이상~

54g미만, 소란 42g이상~48g미만, 경란 42g미만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등급에서 47g이상이던 중란등급을 1g 상향조정하여 48g이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생산자들의 의견과 함께 유통상인, 소비자들과의 의견을 수렴한후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가금육 수입장 승인시  
국내 위생기준에 적합한 작업장만 승인기로**

본회는 지난 9월 중국이 한국으로의 가금육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작업장 승인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음과 관련하여, 수입 닭고기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엄격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작업장 승인도 엄격한 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국내 위생기준에 적합한 작업장만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현재 '중국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작업장은 4개소만 승인되어 있는 상태이다.

**닭티푸스 생균백신 최종시험 후 공급될듯  
2차 보완시험은 차질없이 진행**

제2차 닭티푸스 생균백신 야외실험이 접종 희망 농가의 신청, 접수를 받아 10월부터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백신수입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 최종시험이 마무리된 후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학교 김선중 교수팀에 의해 2차

보완시험(반복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시험이 끝나는 금년말 이후 실용계 농장에 생독백신의 사용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산 닭고기 전용업체 적발시  
불매운동 및 언론에 명단 공개기로**

본회는 닭고기 수입을 막고 육계사육농가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닭고기를 전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국내산 닭고기를 확대사용토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외국산 닭고기 사용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회는 전국 육계사육농가를 주축으로 29개 전국농민단체,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외국산 닭고기를 계속적으로 전용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각 언론매체를 통해 명단공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닭고기 대일 수출 지원확대  
수출규격닭 출하촉진자금 지원 등**

정부는 "계육의 해외 수출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가금학회 심포지움을 통해 내년도 수출규격 닭(2.5kg이상) 출하촉진자금 지원을 비롯해 농축산물 판매촉진자금 지원과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일본 동경 푸덱스(FOODEX)박람회에 한국산 냉장 닭고기 전시지원 등 닭고기 대일 수출 여건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양계**